

#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북·중·러 경제블록화 및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전략

이재영(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3. 08. 25. | CO 23-24

미중 공급망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미·일이 안보-경제-기술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북·중·러 역시 군사안보협력을 확대해 경제블록화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 경제블록화는 중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중러와의 무역을 통해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중러와 북한의 경제협력은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러한 북·중·러 경제블록화에 대한 한국의 경제안보 대응 전략은 한·미·일 가치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에 공동 대처하고, 경제블록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저지하며,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러와의 경제협력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의 핵심 규범인 노동(인권과 강제노동 이슈), 환경(탈탄소와 탄소중립), 디지털(데이터 이동) 등 분야에서 한·미·일 가치동맹이 선제적으로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여 상이한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 블록을 약화시켜야 한다.

2023년 8월 중국 당국은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를 시작했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첨단반도체, 양자컴퓨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적용하여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의 안보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의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의 마이크론 제품 구매 중지 제재를 발표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공급망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인 2023년 8월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세계 무역기구 규칙 의무 이행보고(美国履行世贸组织规则义务情况报告)』의 85쪽짜리 중문과 영문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을 글로벌 공급망 교란자, 시장경제 원칙 위반자로 비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미국이 다자무역체제의 권위, 안정성, 유효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에서 중국의 대전략으로 강조한 다자주의를 정당화했다.

이처럼 미중 공급망경쟁이 더욱 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 혹은 상쇄전략으로 중국이 중심이 되는 북·중·러 경제블록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중·러 경제블록화는 중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로 주도하고 러시아가 공조하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중러와의 무역을 통해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형태이다.<sup>1)</sup> 특히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을 두둔하고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중·러 간 군사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러시아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제법보다 국내법을 상위에 두는 원칙을 포함시켜 대외관계에서 유엔 결의안 등 국제법의 국내 헌법 위배 시 이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리홍중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쇼이구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무기 전시회를 열어 양국 간 무기 거래 의혹 역시 증폭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8월 10일과 11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가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했고, 이번 광복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교환했다. 그리고 최근 북중 국경 육로 재개통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북중 인적 교류 재개 조짐도 보이면서, 북·중·러의 안보 협력이 경제블록화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북·중·러 경제블록화 가능성과 한계

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 무역은 2022년 1,903억 달러, 2021년

1) 여기서 말하는 경제블록화는 냉전 시대 지정학적 진영론의 상호배제적인 블록이 아닌 반미 혹은 반서방 연대와 상호주의적 경제적 특혜에 근거한 어느 정도 개방성을 지닌 지정학적 블록이다. 따라서 경제블록화는 IMF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 경제 통합의 후퇴 현상으로서 세계 경제 파편화의 하위 개념이다. 경제 파편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보고서를 참고. Shekhar Aiyar *et al*, *Geo-economic fragmentation and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대비 30여% 증가했다. 그리고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와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의 퇴출로,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위안화 무역 결제 확대라는 이득을 얻었다. 중국기업 화웨이 역시 미국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에서 5G망을 구축했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서방 기업들의 빈자리를 중국기업들이 메꾸고 있다. 중러 간 이러한 경제협력의 현실을 반영하듯 시진핑과 푸틴은 2023년 3월 '2030년 경제협력 중점 방향 발전계획' 공동성명을 발표해 무역, 금융, 에너지 분야 협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질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중러가 단순한 무역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 기술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북한의 북·중·러 경제블록화 속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체제 생존과 핵 보유 목인 환경 조성을 보장받으면서 미국의 대중/대러 봉쇄 능력과 의지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북·중·러 삼각공조에서 중러는 지경학적 블록 형성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블록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거의 없어 북·중·러 경제블록화보다 중러가 주도하는 경제블록화에 북한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중·러 경제블록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가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 유사 입장 그룹(Likely Minded Group)인 북·중·러조차도 공급망 재편의 핵심 규범인 탈탄소와 환경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환경 분야에서 중국은 탈탄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환경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과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도 거부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우 주요 수출품이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에 미온적이다.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기후 변화 대응과 적응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탄소중립보다 경제 발전권과 체제 생존을 훨씬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중·러 유사 입장 그룹 간 입장 차이는 북·중·러 경제블록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북·중·러 경제블록화의 중심은 경제 규모와 기술 발전 수준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인데, 중국이 그러한 블록화를 통해 얻는 상대적 이익이 크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의 '제한 없는 협력' 관계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봉쇄가 장기화 되고 자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러시아의 화석 연료 수입과 중국산 반도체, 전자제품이나 경공업 제품의 대러 수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미동맹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 체제 생존을 돕기 위해 대북 지원(식량, 유류, 생필품, 북한 노동자 일터 제공 등)과 북중 무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 국가들과 무역이나 공급망

협력이 러시아와의 경제블록화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준다. 그리고 중러의 정치적 수사로서 제한 없는 협력과 실제 관계는 괴리가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은 유럽과의 공급망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러시아 역시 여전히 자국의 극동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 일대일로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중러가 함께 주장하는 다극 체제에 대한 해석도 동상이몽이다. 즉 중국은 다극 체제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대체하여 중국 패권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 강대국이 함께 전 지구적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체제를 원하고 있다.

셋째, 한·미·일과 북·중·러 경제블록의 비대칭성과 북·중·러 경제블록 안에서의 비대칭성이다. 한·미·일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반면, 중국을 제외한 북한과 러시아는 공급망에서 주변부에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러한 위상 차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양자컴퓨팅, 5G, AI 등 첨단 산업에서 미중이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지만, 반도체에서 한국의 메모리와 일본의 소부장은 다른 국가가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지위이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첨단 산업에서 제재 우회를 통해 중국의 적정 기술에 일부 의존하는 것 외에, 미국과 서방의 혁신 기술과 급소(choke point) 기술 접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진기술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북러의 자생적 혁신은 실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무기와 화석 연료, 북한의 가발과 속눈썹 및 광물, 전기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한·미·일과 북·중·러 공급망의 비대칭성과 북·중·러 내의 비대칭성에서 볼 때, 북·중·러 경제블록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 한국의 대응 전략: 한·미·일 가치동맹과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북·중·러 경제 블록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첫째,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제재 무력화에 적극 대처한다.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취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3국 경제블록화는 제재 우회 수단으로써 고착화되어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미·일 공급망협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한·미·일 공급망협력은 사이버 안보와 금융 질서 분야 등에서 공급망 급소 영역에 제재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북·중·러 경제블록화를 통해 음성적·점진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좌절시켜야 한다.

둘째,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을 새로운 규범과 연동시킬 필요가 있다. 즉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은 노동(인권과 강제노동 이슈), 환경(탈탄소와 탄소중립), 디지털(데이터 이동) 등의 규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일 가치동맹 역시 이러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공동의 합의에 도달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경제블록의 상이한 가치 규범과 경쟁을 통해 북·중·러 블록을 약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신장위구르 강제노동과 공급망 규제를 연계시키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역시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디지털 규범에서 북·중·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보다 데이터의 주권을 중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탈탄소와 탄소중립에 있어 앞에서 살펴봤던 북·중·러 내부의 입장 차이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미·일 공급망협력 강화를 통해 북·중·러 사이를 갈라치기 할 수 있다.

셋째, 한·미·일은 한·중·일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 멀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북·중·러 경제블록을 주도하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블록 가담 동기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관련 한·미·일과 공급망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고, 한국과 일본은 2차 전지 핵심 광물과 요소수 같은 범용제품 관련 중국의 공급망 협조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일 가치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과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주도의 북·중·러 경제블록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한·미·일 가치동맹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억제하고, 한·중·일 실용주의 경제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북·중·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